

출제유형분석

총론	5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2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3	지방자치론	3

0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ㄴ.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ㄷ.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ㄹ.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ㅁ.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 ① ㄱ, ㄴ, ㅈ
② ㄴ, ㅈ, ㅋ
③ ㅈ, ㅋ, ㅊ
④ ㄱ, ㅋ, ㅊ
⑤ ㄱ, ㄴ, ㅊ

해설 ㄱ [X]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하며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부관이다.

ㄴ [X] 공공선택론에서는 저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비판하고, 비관료제적 조직과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처방하였다.

ㄷ [O]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ㄹ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하며, 시민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조력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ㅁ [O]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6, 19, 126, 166

▶ ③

02 롤즈(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al)’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83

▶ ⑤

03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면허방식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③ 보조금 방식 ④ 책임경영 방식
⑤ 자조활동 방식

해설 ①, ②, ③, ⑤ [○] 면허방식, 바우처 방식, 보조금 방식, 자조활동 방식은 다양한 민간위탁 방식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계약방식, 자원봉사자방식 등이 있다.

④ [×]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에는 일반행정, 책임경영, 민간위탁, 민영화 방식 등이 있으며, 책임경영 방식은 정부 내부에 단일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독립조직을 만들어 생산은 정부에서 하되, 서비스 제공방식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하여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 분		주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 단	권 력	일반행정(Ⅰ)			민간위탁(Ⅱ)
		<정부의 기본 업무>		<안정적 서비스 공급>	
	시 장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		<시장탄력적 공급>	
		책임경영(Ⅲ)			민영화(Ⅳ)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36, 44~47

► ④

04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 ① 67% ② 50%
- ③ 40% ④ 25%
- ⑤ 20%

해설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내부수익률(IRR) : NPV=0, B/C Ratio=10| 되도록 하는 할인율

$$(B_0 - C_0) + \frac{(B_1 - C_1)}{1+x} + \frac{(B_2 - C_2)}{(1+x)^2} + \dots + \frac{(B_n - C_n)}{(1+x)^n} = 0$$

문제의 중요성	• 정책문제가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현격히 높이는 것이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게 될 문제는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집단의 영향력	• 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 내용이 중요한 것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아 의제화 가능성이 큼.
선례와 유행성	•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 정책체제가 안정될수록 선례답습식으로 의제화됨.
극적 사건과 위기	•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위기 또는 재난(disaster)은 정부의 제화를 유발하는 점화(triggering device)임.
해결가능성	•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분석수단의 선택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부의제화가 어려움.
쟁점화 정도	• 관련 집단들 간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큼.
내용상의 특성	•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적 이익을 가져오고, 해결비용을 일부집단이 부담하는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의 경우 정부의제화가 어려움(Crenson).

참고 compass 행정학 p.204

▶ ①

07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 · 집행한다.
-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 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회사모형에서 자주 빈출되었던 지문이다.

① [×] 회사모형에서는 조직이 환경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거나 환경과 협상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회피해버린다고 본다.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44

▶ ①

08 Cook &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 된 정도를 말한다.
-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설 ⑤ [×] 크리밍 효과와 호오손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해설** ㄱ [X]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이 아닌 만족요인을 충족시켜줘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 불만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이다.
- ㄴ [O]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할 때 인간은 더욱 노력하게 된다고 본다.
- ㄷ [O]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과학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이 된다. 이 외에도 머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적 욕구, 앨더퍼의 생존욕구, 고전적 관료제론 등의 기반이 된다.
- ㄹ [X]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관이다.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를 실현하려는 존재로 파악해, 부단히 자기를 확장하고 창조하며 실현해 가는 주체로 본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66, 370, 377

▶ ④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 공사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 해설** 한국마사회는 자주 빈출되는 문제였으므로 풀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X]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② [O]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X]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④ [X]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⑤ [X]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60

▶ ②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 해설** ③ [X] 개방형 인사관리는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개방형의 정당화의 근거〉

정당화 근거 (장점)	① 보다 넓은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 선택 ② 공직 침체 방지 ③ 공직의 전문성 향상과 임무수행 질 향상 ④ 성과주의적 관리의 발전 촉진 ⑤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데 기여 ⑥ 재직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⑦ 신분보장에 안주하여 복지부동·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관료행태 시정에 기여
한계 (단점)	① 직업공무원제 확립 저해 ② 자의적 인사·정실인사의 가능성이 커짐. ③ 하급 직위 모집에 대한 악영향 ④ 공직의 안정성·계속성 저해, 행정의 책임성 저하 ⑤ 임용비용의 증가 초래, 임용결정 시 실책의 위험 부담 ⑥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임무수행이 좌절 또는 교란될 위험 ⑦ 개방직과 비개방직의 인사제도 이원화는 임용관리 차질 초래 ⑧ 내부승진의 기회 제약, 일제강 약화, 재직자 사기 저하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56

▶ ③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 ⑤ 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해설 ① [○] 상동적 오차에 대한 설명이다. 상동적 오차는 유형화의 착오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의한 오차를 말한다.

※ 문제에서 이미 정답을 알려주었다(고정관념 = stereotyping).

참고 compass 행정학 p.479

▶ ①

14 「국가재정법」 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해설 ⑤ [×] 국가채무관리계획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만, 국가재정법상의 첨부 서류의 개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 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액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⑤

15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 ③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직권×).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국가재정법 제49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성과금(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이내)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00

▶ ③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④ 행정협의회
⑤ 갈등조정협의회

해설 ① [O]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조정제도는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이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조정〉

구 분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중앙-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조 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안전행정부 장관)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요건	당사자의 신청 or 직권	당사자의 신청
구속력	• 법적 구속력 有 • 대집행 등 실질적 구속력 강함.	• 법적 구속력 有 • 실질적 구속력 약함.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843

► ①

17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 ⑤ 계획예산제도

해설 ① [○]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 예산편성제도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51

▶ ①

1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정부 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 ⑤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해설 박근혜정부의 정부 3.0(스마트 정부)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운동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정부, 지방, 국민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것이다.

② [×]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지향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둔다.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안전, 경제 등 주요 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들 중 선정해 개방
2. 민관 협치 강화 :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을 구축(온라인 플랫폼)
3.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4.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 영상회의 등을 통해 원거리 협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워크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
5.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지향적 행정 구현 : 다양한 정보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안전, 경제 등 주요 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지원
6.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7.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통합관리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화사회와 행정 p.684

▶ ②

